

동서독 정상회담 :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논문요약

동서독은 분단 25년만인 1970년부터 독일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총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6차례 비공식 정상접촉도 있었다. 동서독은 지난 1990년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융합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냈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보여준 ①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 ②서로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 ③실현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문제를 우선시하는 현명함, ④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세, ⑤서독의 동독포용 및 통일역량의 강화노력 등은 통독 30주년이 된 지금에 있어서도 남북한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①지속적인 남북대화과 교류협력, ②한반도 통일이해관계국에 대한 평화통일외교의 전개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 강화, ③한국의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동서독 정상회담, 브란트의 동방정책, 남북통일, 교류협력, 통일외교, 통일역량 강화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학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한국의 개천절에 해당하는 10월 3일은 독일의 국경일이다(외교부 2017, 12). 2020년은 독일통일(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과 구별하기 위해 독일재통일로 불리기도 함)이 이루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30년 전인 1990년 10월 3일은 단순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체제로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여 평화통일이 선포된 날이다. 분단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주민들의 시민혁명으로 붕괴된 이후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 서독체제로 편입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된 날이다(권세영 2018, 3).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자유 왕래가 허용된 지 11개월만의 일이다.

통일에 앞서 1990년 9월 12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동서독은 ‘2+4조약’¹⁾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대외적으로 주권을 되찾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3일 과거 독일민주공화국에 속하던 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데 이어,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는 34개 회원국들이 ‘파리헌장’을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유럽에서 종말을 고하였다.”고 선언하였다(김현경 2018).

통일 후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약 359만 명)이고, 인구는 8,141만 명(인구 세계 19위)이며, 국토면적은 357,380km²(한반도의 1.6배, 세계 63위)이다. 그리고 독일의 주요경제지표(2019년 현재)를 보면, GDP는 3.9조 달러로 유럽연합 국가 중 1위(세계적으로는 미·중·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건축정보, 2020).

1) ‘2+4조약’이 체결되기 전만 해도 미국을 제외한 3개 전승국들은 통일에 반대하였다. 반면 미국은 통일된 독일을 21세기 파트너로 설정하고 독일 통일을 대(對)독일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Zelikow & Rice, 1995).

서독주도에 의한 독일통일은 ①통일을 향한 역대 서독정부의 동방정책 등 성공적인 통일정책 방향설정, ②동독민의 동의하에 서독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골격 속에서의 동독 공산주의체제의 흡수통합, ③제2차 세계대전 전승4국(미·영·프·소)의 허가·인정을 받아낸 성공적 외교활동, ④재통일 이후 유럽연합(EU)의 주도를 통한 국제위상의 확보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양병기 2014, 454).

한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어 평화통일의 성취와 함께 아시아 지역과 세계무대에서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즉 한국도 통일이후 아시아연합을 결성·주도하여 한반도, 아시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민족분단과 분단 후 재통일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재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꼬를 튼 것은 서독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이에 따라 추진된 동서독 정상회담이었다. 동서독은 분단이후 25년만인 1970년부터 1990년 통일이 되기까지 7차례의 공식적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중 공식회담 가운데 4차례 회담은 베를린장벽 개방(1989.11.9) 이전에 있었고 3차례는 동독정권의 붕괴과정이 시작된 후 개최된 회담이다. 또한 6차례의 비공식 정상접촉도 있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9). 비록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동서독은 1970년 제1차 정상회담이후 꾸준히 정상급 회담 및 접촉을 지속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주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동서독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최지선 2015, iv).

‘동방정책’ 주창자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1969년 10월 서독 총리에 취임하면서 동서독 정상회담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했다. 그 후 1989년 동독인의 서방탈출 러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해 12월 헬무트 콜 총리와 한스 모드로우프 동독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문제에 급진전을 보였다. 이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2차례 공식적 정상회담이 더 열려 통일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서독은 1970년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년 만

에 독일민족 숙원인 통일을 이룩해냈다(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2007).

남북통일보다 독일통일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통일후 유증에 대한 비판적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서독은 통독 후 내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통독 후에는 신장된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동서독 경우는 남북한과는 분단원인이나 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²⁾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서독 수상 브란트의 동방정책이후 서독정부가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동서독 통일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 30주년이 지난 독일통일의 남북한통일에의 함의는 무엇인가? 동서독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동서독 정상회담: 통독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의 개념·유형·주요사례, 동서독 정상회담의 전개, 동서독 정상회담의 역할·성과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II. 정상회담의 개념·유형·주요사례

1. 정상회담의 개념 및 유형

정상회담(summit 또는 summit meeting)은 Dictionary com.에 따르면 “특히 외교교섭을 실시하고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회담 또는 회의(a meeting or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especially to conduct diplomatic negotiations and ease international tensions”³⁾이다.

2) 분단원인이 전승국에 의한 강제적인 분할점령에 기인한다는 점이 동일하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서 당연히 분단을 받아들여야 할 만한 책임이 존재했지만, 한반도는 단순히 패전한 일본의 식민지였음에도 통일된 해방을 맞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3) <https://www.dictionary.com/browse/summit-meeting>(검색일: 2020/1/6).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두 개 이상의 정부 지도자들 간의 일련의 공식회의”(an official meeting or series of meetings between the leaders of two or more governments at which they discuss important matters, Wehmeier 2000, 1,303)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국가원수들이 모여 여는 회담을 말한다. 정상외교(頂上外交)는 대통령, 주석, 군주, 총리(의원내각제) 등 국가원수들이 벌이는 외교이다. 정사외교는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거의 없었으나 20세기 이후 비행기의 발명 등 교통이 발달하여 하루 안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져 매우 흔하게 되었다(『위키백과』 2020, “정상회담”). 정상회담은 국가나 정부 수뇌가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약을 맺을 때 이루어지며, 상당한 언론노출과 철저한 보안, 그리고 미리 정해진 의제를 가지고서 열리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정상회담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미·영·소 3거두 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4~11일에 열린 얄타회담은 미국, 소련, 영국 3국간에 열린 정상회담이었다. 비록 3거두(巨頭, Big Three)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와 2분의 1거두라고 해야 할 만큼 당시 영국(대영제국)은 쇠락한 상태였다. 이 회담이후 세계는 미소냉전체제로 돌입하였고, 미소는 세 번 정상회담을 가졌다. 1961년의 빈회담, 1972년의 모스크바회담, 1985년의 제네바회담이 바로 그것이다(이종인 2020).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는 국가 외교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등산용어인 ‘정상(summit)’의 외교용어로 되게 만든 주역은 윈스턴 처칠이었다. 암울한 냉전의 한 중앙에 있던 1950년 2월 14일 에든버러에서 처칠은 최고위층과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상에서의 회담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It is not easy to see how matters could be worsened by a parley at the summit).”고 연결하였다. 이

즈음 영국의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여덟 번째 도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신문에는 ‘서밋(summit)’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서밋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구전되면서 외교용어로 자리를 굳혔다. 물론 처칠 이전에도 외교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회담은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항공기 여행, 대량살상무기의 탄생, 언론을 통한 신속한 보도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외교현상으로 발전하였다(Reynolds 2013).

그러나 제네바 정상회담(Geneva Summit, 1955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summit’(정상회담)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Grenville 2001). 냉전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소련이나 중국의 대통령들과 일대일 회담을 위해 함께 하였을 때, 언론은 그 행사를 ‘summit’이라고 표현하였다. 여하튼 냉전이후 ‘정상회담’ 행사의 수는 크게 증가해왔고 오늘날, 국제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s)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또는 world governance)⁴⁾의 가장 흔한 표현이기도 하다(Wikipedia 2020, “Summit (meeting)”).

2. 정상회담의 유형

정상회담(頂上會談)은 두 나라 이상의 국가원수들이 모여 여는 회담을 말한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중일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2~3개의 특정국가 간에 열리는 경우도 있고,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 등 지역단위로 비교적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위키백과』 2020, “정상회담” 참조).

정상회담의 종류는 참가자 수에 따라 크게 양자정상회담과 다자정상회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강녕 2013, 147-148). 양자정상회담은 개

4) 세계 거버넌스는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초국가적 행위자(UN, 국제형사재판소, 세계은행 등)간의 정치적 협력을 향한 운동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는 준수를 시행하기 위해 제한적이거나 구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세계정부는 없으며, 글로벌 거버넌스도 단일체제가 아니다(Wikipedia 2019, “Global governance”).

별정상회담이라고도 불리며,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말한다. 다자정상회담은 3국정상회담, 4국정상회담, 5국정상회담, 그 이상의 정상회담 등 다수의 정상 간의 회담, 바꾸어 말해서 3개국 이상의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회담 및 회담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라 비공개(비밀)정상회담과 공개정상회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초기에 비밀리 가졌다가 후일 공개하는 변화된 형태인 절충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G7정상회담, G20정상회담(한국정상도 멤버) 등과 같은 회의형 정상회담과 비회의형 정상회담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회담과 비공식적 회담의 유형도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정상회담은 회담에 임하는 정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성과 가치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미래한국 2007). 첫째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정상이 모두 정상적인 인성과 정상적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정상회담은 하면 할수록 그 정상들이 속해 있는 양국관계는 건전하게 발전하고 보다 생산적인 결실들이 나올 수 있다. 둘째는 두 명의 정상 중에 어느 한 쪽은 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한 쪽은 비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정상이 속해 있는 나라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상대하는 정상이 설사 비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비정상성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는 두 명의 정상 모두가 비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정상회담을 하는 두 명의 정상이 모두 비정상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및 그 결과는 솔직히 어느 방향으로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럭비공과 같다고 할 수 있다(미래한국 2007).

3.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의 주요사례

데이비드 레이놀즈(David Reynolds)는 20세기 역사를 바꾼 6대 정상회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즉 ①체임벌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 나치 총통이 만난 1938년의 뮌헨회담, ②전후 유럽의 판도를 결정하기 위해 1945년 처칠 영국 수상, 루스벨트 미 대통령, 스탈린 소련 최고사령관이 만난 얄타회담, ③케네디 미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가 1961년 만난 빈회담, ④닉슨 미 대통령과 소련의 정치가 브레즈네프가 만나 냉전의 해빙에 시동을 걸었던 1972년 모스크바회담, ⑤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터 미 대통령이 주선해 이스라엘 정치가 메나헴 베긴과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1878년 함께 자리한 캠프데이비드회담(이상언·장정훈 2000, 8), ⑥동서냉전의 평화적인 종식을 이끌어낸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만난 1985년 제네바회담이 바로 그것이다(Reynolds 2007; 이종인 2020).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은 선정기준 및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는 다르지만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정상회담들이 있다. 세기(100년)를 대표할 정도의 중요한 회담이라는 의미에서 세기의 담판으로도 불리는 역사적인 만남들이다. 1972년 중국에서 열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국가주석·저우언라이 총리와 의 첫 미중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⁵⁾ 이 회담이후 중국은 서방세계를 향해 썼던 ‘죽의 장막’을 열었고 1979년 미중수교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국교재개를 위해 벌인 1972년의 첫 미중정상회담은 핑퐁외교(Pingpong Diplomacy)로도 불린다.⁶⁾ 그해 2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닷새 동안 여섯 차례 만나 무려 20여 시간 대화를 나눴다. 베트남전 종전과 대만에 주둔한 미군철수 등의 입장차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회담을 진전시킨 원동력은 저우언라이 총리의 인간

5) “외교문제는 담당 고위관리들도 모르게 진행돼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진 키신저가 조용히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나 중국이 닉슨 대통령을 초청하는 형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예영준 외 2000c, 8).

6) 탁구를 이용한 외교. 1971년 일본의 나고야에서 열린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미국 탁구 팀과 기자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가 개선된 데서 온 말이다(Wikipedia 2020, “Ping-pong diplomacy”).

적 호소력이었다. 회담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밤, 그는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의 숙소를 몰래 찾아가다. 특별한 협상카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중국 지도부에서는 나만한 온건파가 없다. 내가 죽고 나면 양국관계개선은 어렵다.”며 측근들에게 숨겨왔던 암 투병사실을 키신저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헌신성은 닉슨의 마음을 움직였다. 닉슨은 훗날 회고록에서 “저우언라이 총리의 냉철하고 진지한 자세와 교섭력에 매료되었고 마침내는 존경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1994년 비밀해제된 회담기록에는 닉슨이 소련 군사력에 대한 고급정보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전략 등을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털어놓았다고 적혀 있다(예영준외 2000a, 8).

1989년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서 개최된 조지 H. W.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집권: 1989~1993)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 공산당 서기장과의 미소정상회담은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회담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냉전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선언하였다(라동철 2018).

반세기 가까이 전 인류를 짓눌러온 냉전구도는 1989년 12월 2일 몰타 미소회담장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이 한 마디로 양상이 달라졌다. 이 역사적 순간을 연출한 주인공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었다. 11개월 전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냉전의 벽이 허물어져가는 세계를 목격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가 부른 공산권의 자유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었다. 부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미소 양국정상의 군축협상이 이듬해인 199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해를 넘길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고르바초프에게 친서를 보내 여러 차례 회담을 재촉하였다. 부시의 집념은 몰타 섬에서의 함상 비공식 회담을 이끌어냈다. 부시는 유럽에 배치된 재래식무기와 화학무기의 대폭 감축을 약속하였다. 또 대소(對蘇)경제제재 완화를 약속하며 냉전청산을 위한 성의와 의지를 보여줬다. 고르바초프도 역사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의 적대관계 청산선언과 함께 동구권의

정세변화는 더욱 빨라졌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독일통일이 실현되었다. 몰타회담을 끝낸 뒤 부시는 “이제 영구평화시대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정확히 국제정세를 읽고 시의적절하게 담판 시기를 포착한 부시의 외교는 냉전의 종식을 몇 단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예영준 외 2000c, 8).

또한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의 만남은 20년 후 독일통일의 물꼬를 튼 회담이었다. 관련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부푼 기대 속에 진행된 1970년 3월과 5월의 두 차례 동서독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만으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브란트 서독총리는 동독의 입장이 강경해 회담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략을 바꿨다. 동독과의 회담을 잠시 중단하고 대신 동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소련을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때마침 소련 수뇌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호의를 갖고 있던 참이었다. 브란트는 1970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만나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해 동독에 압력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대신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소련의 관심사였던 동독·폴란드 국경선문제에서 파격적으로 양보하였다. 당시 동서독간의 현안은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문제였다. 서독은 협정을 통해 서베를린에 대한 기득권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고자 하였지만 동독의 입장은 워낙 완강하였다. 이때 브레즈네프는 동독이 아닌 서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완강한 울브리히트 대신 호네커를 제1서기에 앉힌 뒤 서독의 입장을 받아들여 1971년 베를린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동서독간의 대화도 소련의 영향력으로 다시 활발해졌다(예영준 외 2000c, 8).

주변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독일의 외교력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성사시키는 단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동독을 점령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헬무트 콜 당시 총리는 고르바초프와의 담판을 통해 소련이 중립화 통일방안을 철회토록 하였다. 아울러 소련은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잔류에도

동의하였다(예영준 외 2000c, 8).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회동은 1961년 국교단절 후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해 가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첫 정상회담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만남이었다. 분단이후 반세기 만에 성사된 최고지도자들의 만남은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졌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라동철 2018).

하지만 세기의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었다. 1961년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만남은 미소간 대결을 격화시켰다. 2000년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만남도 실패로 끝났다(라동철 2018). 평화를 위해 마련된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결과가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으나 뮌헨회담 1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 알타회담은 전쟁을 1년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으로 파국을 면치 못한 회담도 있다. 빈회담에서 미국은 호전적인 흐루시초프의 작전에 휘말려 쿠바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불러왔다고 데이비드 레이놀즈는 분석한 바 있다(Reynolds 2013; 이종인 2020).

지난 2018년 6월 12일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각국의 언론들이 앞 다퉈 대서특필한 세기적 만남이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하였듯이 '6월 12일은 과정의 시작'인 만큼 성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동철 2018).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6.12.)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예고된 북·미 간 후속 실무협상의 교착상태 및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의 결렬이 향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I. 동서독 정상회담의 전개

1. 동서독 정상회담 배경 및 개요

1) 동서독 정상회담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패망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은 194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기반한 동독 정권과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독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타 분단국가와 마찬가지로 동서간 냉전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동서독간의 대립과 반목 역시 정도를 더해 갔다(황흥룡 2018).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각자의 강대국들에 의해 대외정책적 주권을 제한받았다. 당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본이나 베를린을 대신하여 양독 간의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서독 간의 문제는 곧 미소간의 체제대결문제였고 이는 세계질서의 유지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통일연구원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회의(2001.6.13)에서 로타 드메지어(Lothar de Maizier) 전 동독총리가 “양독간의 관계서 베를린을 둘러싼 갈등, 베를린장벽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은 초강대국과 진영들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시판이라 할 수 있다.”(통일연구원 역 2001, 31-32)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동서독은 강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독일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동서독문제는 독일내부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함과 동시에 냉전의 시작으로 분단된 독일의 통일은 국제적 합의에 따른 승인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세력 균형 변화 및 세계질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두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승인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은 양독 간의 관계를 정상

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및 동유럽과의 관계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10월 출범한 브란트정부는 신(新)동방정책을 내세우며 동서독 간 긴장완화를 지향하고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안보를 지향하고자 하였다(통일연구원 역 2001, 34).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독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서방우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였다. 또한 서독정부는 그 반대로 소련의 의중도 앞서 파악하고 난 후 소련과의 비밀교섭을 통해 첫 동서독정상회담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타 분단국가들과 달리 동서독 통일의 가장 큰 원인은 대립의 와중에도 민족의 공존을 위한 상호간 부단한 노력들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독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과 정치교류는 물론 사회문화 인도주의적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1969년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아데나워 초대총리가 취해 온 ‘힘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위 ‘동방정책’(東方政策, 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소련 및 동유럽국가에 이어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독일의 ‘동방정책’은 전통적으로 독일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대해 취해온 정책을 말한다. 브란트는 독일의 분단 현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유럽 국가의 국경선 인정 등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며,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동독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했다. 브란트가 추진한 정책은 기존의 동방정책과 구별하여 ‘신동방정책’이라고 한다.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은 ‘신동방정책’이 독일통일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었다(손선홍 2016, 65).

동서독은 1972년에는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에는 유엔에 동시가입한 후 상주대표부를 교환하였다. 서독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동서독 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 통신, 스포츠, 종교, 환경 및 보건 등 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작은 발걸음’(Kleine Schritte: Small Steps)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Change through Approachment)는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 재직 당시인 1963년 그의 보좌관이었던 에곤 바(Egon Bahr)

가 이미 사용한 이래 동방정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권세영 2018, 5).

2) 동서독 정상회담의 개요

동·서독은 분단 25년만인 1970년부터 독일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총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은 모두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표 1> 참조)⁷⁾과 6차례의 비공식 정상접촉을 가졌다.⁸⁾ 한반도 분단은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복합형이라면, 동서독 분단은 순수한 국제형 분단(외세에 의한 전범국 강제분단)이다 (김학준 1989. 6) 따라서 동서독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장벽과 소련과 미·영·불의 대외정책적 주권제한요인이 동서독 통일억제요인이었지만 남북한 경우와는 달리 동서독 정상회담 과정에서 동일민족이라는 구심력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동서독 공식 정상회담은 주로 의제가 있는 공개된 양자회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 1> 동서독간의 공식 정상회담

| 주관자 | 회담 일시 및 장소 | 논의내용 | 개최배경 |
|----------------|-----------------------|--------------|-----------|
| 제1차 브란트-슈토프 | 1970.3.19 동독 에어푸르트 | 양국 관계 정상화 | 소련의 총용 |
| 제2차 브란트-슈토프 | 1970.5.21 서독 카셀 | 양국 관계 정상화 | 소련의 총용 |
| 제3차 | 1981.12.11.~13 | 경제협력 등 양독 관계 | 서독의 |

- 7) 제1-2차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칭하려면 당시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제1서기장이었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서독 브란트 총리의 대화 파트너 여야 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이 경우에도 정상회담으로 칭하기로 한다. 모드로우 총리의 경우 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1989년 12월 1일 동독의회가 헌법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원칙을 삭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동독의 정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영운·양현모 2009, 9).
- 8) 동서독 정상간 비공식접촉 주요사례로는 1982년 11월 14일 카를 카르스텐스 서독 대통령-호네커 의장의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차 모스크바에서의 만남, 1984년 2월 14일 콜 총리-호네커 의장의 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차 모스크바에서의 만남, 1985년 3월 12일 콜 총리-호네커 의장의 체르네펬코 장례식 참석차 모스크바에서의 만남 등을 들 수 있다(호광석 2000, 87).

| 슈미트-호네커 | 동독 베어벨린 | 전반 | 요청 |
|-----------------|---------------------------|---|-----------|
| 제4차 콜-호네커 | 1987.9.7.~11 서독 본 | 동독 주민의 서독 여행, 환경과학, 기술분야 교류 | 동독의 요청 |
| 제5차 콜-모드로우 | 1989.12.19.~20 동독 드레스덴 | 동독 경제지원 및 동독개 혁, 동독 내 정치범 석방, 양독 간 경제·사회·언론 등 교류 확대 합의 | 동독의 요청 |
| 제6차 콜-모드로우 | 1990.2.13.~14 서독 본 | 동독 경제지원 및 통일 방 안과 신속한 화폐 및 경제 통합을 위한 방안 논의 | 동독의 요청 |
| 제7차 콜- 드 메지어 | 1990.4.24. 서독 본 | 화폐·경제·사회통합 실시 합의 | 동독의 요청 |

출처: 정용길 2009, 170; 평화문제연구소 2012을 참조하여 작성.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은 베를린장벽 붕괴(1989.1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식회담 가운데 4차례 회담은 베를린장벽 개방 이전에 있었고 3차례는 베를린장벽 개방이후 동독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시작된 후 개최된 회담이다(염돈재 2014). 베를린장벽 붕괴(1989.11.9) 이전에 있었던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가운데 세 차례의 회담은 서독의 요청과 소련의 종용에 따라 개최되었고 콜-호네커 회담은 동독측 필요에 따라 소련의 승인 하에 개최된 회담이었다.

동서독 정상회담은 양측 수뇌 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물론 첫 정상회담부터 만족할만한 합의 또는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회담에서는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회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만 보면 7차례의 동서독 정상회담이 독일통일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동서독이 각각 처한 상황을 보면 정상회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브란트 총리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동의아래 동독각료회의의 장에게 구체적인 회담개최를 제의⁹⁾하면서 동서독 간 제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독관계 진전과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제1, 2차 회

9) 즉 연방정부는 독일 내에 또 하나의 국가로서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러한 정책에 입각하여 양독정부가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할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담은 관계정상화 초기단계, 제3, 4차회담은 양독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단계, 제6, 7차회담은 통일달성직전단계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며 동서독정상회담은 독일통일을 시동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통일부 2000, 2).

2. 정상화 초기단계

1) 제1차 에어푸르트 정상회담(1970.3.19)

1970년 3월 19일 최초로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된 배경에는 서독에서 시민당(SPD)의 집권과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1960년대 후반기의 동서 간 해빙무드 조성을 꼽을 수 있다(정용길 2009, 156).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1969년 10월 28일 취임 연설에서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의하고 동독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또한 브란트 총리는 1970년 1월 22일 동독 슈토프(Willi Stoph)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회담의제로 무력행사 포기, 동등한 자격에 입각한 양독관계의 수립, 분단고통 완화를 위한 실질적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동독 또한 찬성하여 1970년 3월 19일 동독의 에어푸르트(Erfurt)에서 브란트 서독총리와 슈토프 동독총리간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김영운·양현모 2009, 10).

서독과의 접촉을 체제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가급적 기피해 오던 동독 울브리히트 정부가 이 회담에 응한 것은 소련의 종용 때문이었다. 당시 미중접근에 위협을 느낀 소련¹⁰⁾은 유럽의 긴장완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출범, 제2차 세계대전 후 설정된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국제적 인정확보 등을 위해 서독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의도를 간

10) 1969년의 우수리강 영토분쟁을 절정으로 1960년대 중소대립이 심화되었다. 우호적 관계였지만 중국의 힘이 세지면서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찾은 파트너가 바로 초강대국인 미국이었다(최영 1975, 1450).

파한 브란트 총리는 1969년 7월 측근인 에곤 바(Egon Bahr) 총리실 차관을 모스크바에 파견, 모스크바조약 체결을 위한 비밀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동서독 정상회담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브란트의 제의는 기민당(CDU: Christian Democratic Union) 정부의 친서방 정책과 공산권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련 및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며 브란트가 새로이 추진한 ‘동방정책’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였다(염돈재 2014; 평화문제연구소 2012). 분단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정상회담에서 브란트 총리는 ①외국이 아닌 독일민족으로서의 양국의 단일성 수호의무, ②영토보존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경선의 상호존중, ③상대방의 사회구조에 대한 폭력적 변화시도 금지, ④선린관계적 협력, ⑤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4대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존중(통일문제), ⑥베를린과 이를 둘러싼 지역의 개선(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왕래자유화)을 강조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0).

이에 대하여 동독은 ①국제법상 양국 간의 동등한 관계수립과 서독의 단독대표권 포기, ②상호내정불간섭과 서독의 할슈타인원칙 포기, ③상호간 무력포기조약 체결, ④동서독 유엔동시가입, ⑤핵무기포기와 생화학무기의 생산·사용 및 저장포기와 군비지출의 50% 삭감, ⑥제2차 세계대전 잔재문제 토의, ⑦300만 동독인의 서독망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273억 달러보상 등을 주장하였다(백경남 1991, 158).

두 총리의 기초연설에 이어 속개된 회담에서 동독 슈토프 총리는 브란트 총리의 특별전권위임자나 공동위원임명제안을 동독의 대사교환제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였고 브란트 총리는 동독이 제시한 기본원칙 제7항에 대해 “양측이 각기 도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정용길 2009, 158).

1970년 3월 19일 세계인의 이목은 분단 25년 만에 열린 첫 동서독 정상회담에 집중되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와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가

만남 동독의 에어푸르트엔 세계 각국의 보도진 6백여 명이 몰려들었다. 때마침 동서진영의 데탕트도 무르익어 뭔가 커다란 것을 합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막상 회담장 안에서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서독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보았으나 동독은 국제법상 별개국가로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요구하였다. 단 한 번의 회의로 무언가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예영준 외 2000b, 11).

결국 제1차 동서독정상회담은 특별한 성과없이 양국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양측 간에는 5월 21일 서독 카셀에서 제2차 회담을 하기로 한 것 외에 실질적인 합의사항 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독정상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동서독대화시대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회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영운·양현모 2009, 10).

2) 제2차 카셀 정상회담(1970.5.21)

두 독일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은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도시 카셀(Kassel)에서 이루어졌다.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관계발전을 위해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시하며 20개 조항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¹¹⁾

브란트 총리가 발표한 20개 조항의 선언문에는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이 함축되어 있었다. 20개 조항의 주요내용은 ①무력포기와 영토불가침, ②할슈타인독트린의 폐기(1957년부터 서독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취했던), ③4대국의 독일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보장과 서베를린의 서독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지속, ④동서독간의 여행의 확대와 국경선 지역주민의 자유왕래,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⑤동서독 유엔동시가입, ⑥연락대표부의 교환(양국의 수도에 정식 대사급이 아닌), ⑦동서문화교류 확대, ⑧특별조세관계의 기반위에서 동서독 경제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래식 2008, 210-211).

11) 이 내용은 나중에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의 주요내용으로 채택되었다(박래식 2008, 210).

브란트의 20개 항목에 대응하여 동독 슈토프 총리는 ①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이 모든 문제에서 우선시되어야 하고, ②파리조약 제7조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으며, ③통일은 불가능하고, ④서베를린은 서독의 영토가 아니라 동독영토내의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이며, ⑤양독국가 유엔(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독은 서독이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제2차 정상회담이후 동서독대화는 잠시 중단상태에 들어갔다(김영운·양현모 2009, 11).

그러나 이미 국제관계는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동독은 서독과의 대화중단을 깨고 다시 한 번 서독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1970년 10월 29일 동독은 동독의 국제법적인 국가인정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동서독 간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1).

서독대표 바(Egon Bahr)와 동독대표 콜(Michael Kohl)이 나선 동서독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1971년 9월 3일 베를린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서베를린과 서독간 자유로운 통행이 4대국협정에 의해 보장되었고, 베를린 정세도 안정을 찾았다. 베를린회담에 이어 1972년 5월 26일 교통조약이 체결되었다. 교통조약은 동서독 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맺어진 최초의 조약으로 서독시민이 동독을 여행할 때 절차간소화와 다양한 여행목적을 허용하였다. 이 조약은 독일내 긴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관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1-12).

요컨대 제1, 2차 정상회담은 여건이 성숙치 않은 가운데 소련의 종용에 따라 개최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제1차 정상회담 대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합의 없이 종료되었고, 양측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재확인하였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하지만 제1, 2차 정상회담이후 실무접촉을 거쳐 1972년 12월 21일 서로를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 있기까지는 정상회담 2회, 장·차관회담 70회, 실무국장급회담 200회, 모두 2년간 272회

회담이라는 부단한 동서독간의 대화와 실천적 노력이 있었다(김강녕 2001, 273). 이후 동서독은 1973년 9월 유엔 동시가입과 1974년 3월 상주대표부 개설로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갔다(김재현 2017).

3. 양독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단계

1) 제3차 베어벨린 정상회담(1981.12.11.~13)

제3차 정상회담은 198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베를린 근교인 베어벨린에서 서독의 슈미트(Helmu Schmidt) 총리와 동독의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¹²⁾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11년 만에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은 서독측이 요청하였으나 동독측 사정으로 1980년 1월 및 8월 22일 등 2차에 걸쳐 연기된 후 개최되었으며 이 역시 동독이 소련의 종용 때문에 서독측 요청을 받아들인 회담이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린 당시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폴란드의 노조사태, 소련의 유럽핵무기 배치에 맞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중거리핵탄두 서독배치 등으로 미소관계는 악화되었고 유럽에서는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끼게 된 동서독 양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내독관계의 유지·발전을 모색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2).

이 회담에서 서독의 슈미트 총리는 동서독기본조약(1972.12.21)의 성실한 이행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결의사항준수, 소련 핵무기의 위협제거, 유럽평화를 위한 동서독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은 동서진영 간 대립의 첨병으로 전략한 동서독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고 유럽평화유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의 서독배치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양

12) 제2차 정상회담까지 동독측 대표는 내각 총리이었던 빌리 슈토프였는데, 3차 정상회담부터 동독의 국가원수인 당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동독 대표로 참가하였다.

국 지도자들은 평화정착과 긴장완화가 강조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정용길 2009, 163~164).

즉 “①독일 땅에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 ②양독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군사동맹에 속해왔지만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③양독은 국가 간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헌장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목표 및 원칙을 재확인한다. ④기본조약과 후속협정을 기초로 양독관계를 발전시킨다(㉠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적인 분야에서 고 통완화에 중점. ㉡여행자·방문자 교류확대, 공동위원회활동을 통한 쟁점사항 개선, 학문·과학기술·교육분야에서의 협력의 강화, ㉢문화교류강화, 언론의 활동여건개선을 통한 국가 간 정보교류의 중요성 강조, ㉣내독간 교역강화와 제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 소련의 천연가스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한). ⑤양독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분야에서 고위급접촉, 다른 영역에서 대화와 접촉이 중요하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김영운·양현모 2009, 12-13).

제3차 정상회담은 국제정세 냉각이라는 정치적 상황변화 때문에 개최되었지만, 스윙(Swing, 양독간 채무청산용 차관) 연장문제, 교통·환경 보호·상호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12월 21일 기본조약체결이후 동서독관계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의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서독의 지원이 절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3).

즉 호네커는 당서기장으로 취임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재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동독의 대외부채가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오일위기는 동독의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1978년에는 외환변제 불능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서 냉전으로 동서독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면 동독의 피해가 커질 것이므로 호네커는 동서독관계의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3).

요컨대 제3차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동서독 양측은 ①독일 땅에서의 전쟁발발 불원(不願), ②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공동기여, ③기본조약에 기초한 상호관계의 발전 등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기존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였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제3차 정상회담에서 동서독 양측은 평화와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긴장 고조의 원인을 상대진영 핵무기의 유럽배치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2) 제4차 본정상회담(1987.9.7~11)

제4차 정상회담은 경제약화로 서독의 지원이 필요해진 동독의 제의로 1984년 9월 추진하였던 정상회담이 3년간 연기된 후 개최된 것이다. 1984년 회담이 연기된 것은 ①신냉전분위기가 아직 해빙무드로 돌아서지 않았고, ②서독인 여행자가 동독 검문소에서 동독군인의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 동서독관계가 냉각되었으며, ③소련이 1982년 집권한 기민당 정부에 신뢰를 갖지 못한 데다, ④동독이 1983년 및 1984년 2차에 걸쳐 서독으로부터 19억5천만 마르크의 현금차관을 얻어간 것을 계기로 소련이 동구 위성국가의 독자적 서방접촉을 견제하였기 때문이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제4차 정상회담은 제3차 회담에 이어 곧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서독에서는 사민당의 슈미트 총리가 퇴임하고 기민당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취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독인 여행자가 동독검문소에서 동독군인의 강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소련의 견제도 있었는데 소련은 서독이 동독에게 1983년 10억 서독마르크, 1984년 9억5천만 서독마르크의 대규모차관을 제공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당시 소련은 체르넨코(Konstantin Ustinowitsch Tschernenko)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된 내부권력변동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 동구권국가들의 대서방접근을 견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호네커의 서독방문은 계속 연기되었다(김영운·양현모 2009, 13-14).

그러나 ①레이건 행정부의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미소관계가 호전되고, ②1987년 4월 동독을 방문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양해하였고, ③1982년 집권한 기민당 콜 정부가 사민당의 대동독 교류·협력 기조를 계승하면서 동서독 주민간의 왕래와 교류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회담성사가 가능해졌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제4차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동서진영 간 화해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여기에 1987년 4월 고르바초프의 동독방문 시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양해함에 따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었다. 198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독의 수도인 본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와 같은 양국의 입장차이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분야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4).

동독측은 이 회담에서 경제지원과 외교적 승인확보를 중요시한 반면, 서독측은 동서독 주민간의 왕래확대와 민족적 유대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회담 결과, 양측은 ①「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교환 협정」 등 3개의 협정 서명, ②방사능 및 환경오염에의 공동대처, ③동독주민의 여행규제 완화, ④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의 인권개선, ⑤청소년 및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동서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이 회담에서 동서독은 국제정치적 현실과 유럽평화유지에 대한 공동책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견차이(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하였다. 대신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 확대, 정치적 차원의 접촉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교환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방사능 및 환경오염에 공동대처, 여행규제완화, 동독내 반체제인사들의 인권문제, 관광 및 청소년교류의 확대, 양독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군축추구, 서독의 대동독 차관증액 및 교역확대 같은 경제교류의 확대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서독 콜 총리의 동독방문초청과 수락도 있었다(정용길, 2009, 168).

호네커(Erich Honecker)의 본(Bonn)방문은 위에서 언급한 성과이외에도 여러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서독통일을 반대하면서 상호독립국가인정과 상호교류를 주장해왔던 동독은 호네커의 서독수도방문에 큰 의미를 두었다. 상호실무협상의 의미를 가졌던 이전의 정상회담들과는 달리 제4차 동서독정상회담은 동독의 최고권력자가 서독의 수도를 공식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독은 이 회담을 통해 서독이 실질적으로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국내외적으로 활용하였다. 호네커는 만찬행사에서도 동서독은 상호주권을 존중하는 완전한 독립국가이며 이러한 공동인식 하에서로 교류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14).

과거와는 달리 이 회담이 성공한 것은 국내외 환경변화가 미친 영향 외에도 양측이 실현 가능한 분야에 논의를 집중한 데다, 이제까지 호네커의 방문을 거부해왔던 콜 정부가 외국 국가원수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의전행사로 호네커를 후대할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¹³⁾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내독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서독측은 동독의 국가연주, 국기 게양, 의장대 사열 등 국민급 영접을 함으로써 동독인의 서독여행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동독측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그러나 콜 정부의 이러한 환대는 기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야당인 사민당은 초대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총리 이후 지속되어 온 기민당의 보수적인 내독정책이 드디어 끝장났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비난에 대해 통일 후 콜 총리는 회고록에서 “양독 간 국경의 문을 더 활짝 열기 위해 나는 에리히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호네커의 방문은 서독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13) 호네커 동독 서기장의 서독 방문(1987.9.7.~11) 중 호네커는 붉은 카펫이 깔리는 국민영접을 받았고 제4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는 그 이전의 정상회담들과는 달리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그러나 서독측이 강력히 요구하여 회담 시 양측 대표의 연설을 동서독 주민들에게 함께 생중계하고, 이 연설에서 콜 총리가 동독측의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통일의지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천명하여 동독주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과 1986년 200만 명에 불과하던 동독인의 서독방문이 1988년에 675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요컨대 동서독 공식적 7차 정상회담 중 가장 극적인 정상회담으로는 제4차 정상회담이 손꼽힌다. 이 회담은 198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독 수도 본(Bonn)에서 개최된 회담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동독이 원해서 열리게 된 회담이다. 호네커 방문 시 의전 및 행사에 동독국기가 게양되는 등 다른 국가의 정상방문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서독국민들 사이에는 서독정부가 동독정부를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이 있는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동독이 붕괴하고 서독에 편입되어 통일이 되리라고는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김영운·양현모 2009, 14-15). 제4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서독 국민들이 동독정부를 인정해줌으로써 분단 고착화의 우려나 비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을 해결과 관련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작지 않다.

4. 통일달성 직전단계

1) 제5차 드레스덴 정상회담(1989.12.19.~20)

제5차 정상회담의 논의주제는 양독관계의 현황 및 발전방안이었다. 양독정상은 ‘특별한 관계’에 따라 동서독조약공동체 결성외에 경제·환경·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브란덴부르크 문을 12월 22일에 개방하고 화폐교환비율을 서독1마르크에 동독3마르크로 합의하였다. 모드로우 총리는 콜 총리에게 동독의 개혁프로그램을 설명하며 민주주의선거법을 토대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시장경제도입 형법 및 헌법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환영하면서 동독과의 교류촉진을 위해 그동안 지원하던 지원금을 연간 2억 마르크에서 1990년부터는 3억 마르크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양독 정상은 1990년 1월말이나 2월초 서독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최지선 2015, 43).

제5차 정상회담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경제협력을 위한 위원회 구성, ②우편 및 전화연결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 ③29억 DM의 여행기금 설치, ④환경분야에서의 협력, ⑤ 여행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최지선 2015, 43).

제5차 정상회담은 동독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정권이 물러나고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서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독에 지원을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며 독일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2월 22일 콜 총리와 모드로우 총리 참석하에 제5차 정상회담(1989.12.19.~20)에서 합의한 브란덴부르크문(Brandenburg Gate)이 개방되었다. 이 문이 개방되자 드레스덴 시민들은 열광하며 곧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최지선 2015, 43).

2) 제6차 본 정상회담(1990.2.13.~14)

서독은 통일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990년 2월 각의에 연방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일통일위원회’를 구성하였다(손선홍 2005, 324). 한편 동독은 1990년 1월 처음으로 자유총선거를 3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월에는 모드로우 총리가 ‘하나의 조국독일을 위한 4단계통일방안’을 발표한 후 서독의 본을 방문하여 제6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0년 2월 13일 모드로우(Hans Modrow) 총리가 17명의 각료를 대동하고 온 본(Bonn) 회담에서 동독측은 서독측의 인민의회 선거운동 참여는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통화통합과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였다. 이 회담에서 모드로우는 1990년 2월 3일 다보스 비공식 만남에서 콜 총리에게 요청하였던 150억 마르크의 지원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콜 총리가 거부하면서 50억 마르크의 긴급지원 계획을 제시하자 통화 및 경제동맹 구성을 협의하자는 콜 총리의 제안을 수락

하지 않을 수 없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동독의 4단계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제1단계: 화폐·경제·교통·법률분야 상호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연합적 형태의 조약공동체 창설을 위한 양독간 협력과 우호선린조약 체결, 제2단계: 동·서독 공동의회, 분야별 공동행정기구 등 공동위원회와 집행기구 설치를 통한 동·서독간 국가연합 형성, 제3단계: 동·서독 주권을 국가연합에 이양, 제4단계: 단일 헌법·의회·정부를 구성하여 독일연방 형태의 통일달성” 이 바로 그것이다(김영윤·양현모 2009, 90).

제6차 정상회담 개최 당시 서독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으로부터 독일통일의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콜 총리는 독일통일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콜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심각한 경제위기 및 동독으로부터의 늘어만 가는 탈출자와 이주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경제 및 화폐통합관련협상과 함께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다. 한편 서독은 동독에게 화폐통합을 하는 조건으로 포괄적인 시장경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서독의 화폐통합의 제안에 대해 모드로우 총리는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가 추진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하였다. 한편 모드로우 총리는 서독정부가 지난 12월 합의한 동독에 대한 연대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콜 총리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96).

3) 제7차 본 정상회담(1990.4.24)

제7차 동서독정상회담은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 집권하게 된 동독의 드메지어 총리와 서독 콜 총리 간에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24일 본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동·서독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199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화폐경제와 사회동맹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손선홍 2005, 328).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집권한 로타 드메지어 총리가 4월 24일 본에

서 콜 총리와 회담을 갖고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 체결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독일통일 작업은 급진전되었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이에 따라 양국은 5월 2일 화폐교환비율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두는 등 세부계획에 합의하였고 5월 18일에는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전문 6장 7개부속문서와 공동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21일 서독과 동독의회에서 각각 비준되어 7월에 발효되었다(손선홍 2005, 328).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일인은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어 1970년 첫 회담 이후 20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역사적인 독일통일을 실현시킨 것이다.

IV. 동서독정상회담의 역할·성과와 한국에의 시사점

1. 동서독 정상회담의 역할·성과에 대한 평가

동서독 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 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었던 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다가오는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개되었다. 동·서독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을 나열한 다수의 연구들은 독일통일에 있어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최지선 2015, 4).

염돈재(2010)는 7차례의 공식적인 동·서독 정상회담을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아보고 간략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서독 정상회담 대부분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상호교류의 물꼬를 트기보다는 기존교류 관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동서독 정상회담은 양측 수뇌 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크나 동·서독 간 교류·협력 강화의 계기가 된 제4차 콜-호네커 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 성과가 없는 형식적 만남에 불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우베 뮐러(Uwe Mülller, 이봉기 2006) 또한 각각의 정상회담은 대단히 높은 상징적 의미를 가졌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 성과물은 대단히 적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양독간의 정상회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인내와 원칙에 충실할 때 성과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서독정부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 동독정부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전독일민족에게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통일조항은 어느 시점에서든 양보하지 않았고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항상 논쟁이 되었던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뮐러는 만약 서독이 양보하였다면 이는 40년의 분단 후 1990년 이룩하였던 독일통일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지선 2015, 4).

한편 송태수(2010)는 양국의 안보적인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보았다. 그는 베를린 장벽붕괴 이전에 개최되었던 4차례의 정상회담을 주목하며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 및 당시 ‘독일내 전쟁재발방지’라는 지향가치 아래 동·서독은 어려운 의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전략을 쓰며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하는데 공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상두(2007)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념과 군사분야에서 대결하며 체제분야에서 경쟁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졌던 동서독관계를 “적대적 협력관계”라고¹⁴⁾ 규정하였다. 그는 적대적 협력관계는 당사국간의 이익이 상호간에 완전히 상충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며 여기서 당사국간의 협력가능성은 양국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결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그는 동서독 정상회담이 양측지도자들의 인식과 결단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이는 양독간의 여러 정치협력 중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파급효과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선(2015)은 동서독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지적하고

14) 적대적 협력관계란 양측 모두 어느 한편의 도움 없이는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형성되는 관계로서 협력을 통하여 생기는 협력이익을 보다 많이 양보할 의사를 가진 강자의 적극적인 자세에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고상두 2007, 176).

있다. 최지선은 기존연구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정상회담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정상회담 개최과정 및 성과를 정리하였을 뿐 각 회담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당시 진영국가의 영향으로 인해 동·서독의 대외정책적 주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최지선 2015, 5).

위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독일통일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역할의 중요성 평가는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역할과 비중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서독간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동서독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협력과 제반관계 발전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49년 각기 출범한 동서독은 1970년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1990년 통일 시까지 총 7회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첫 정상회담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질서에서 데탕트(긴장완화)가 성숙되어 가던 1970년 3월 동서독 접경지역인 동독의 에르푸르트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쉬토프 수상 간에 개최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은 같은 해 5월 역시 접경지역인 서독의 카셀에서 동서독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양 수상 간에 개최되었다. 제1~2차 정상회담은 동서독 간의 이견으로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동서독뿐만 아니라 동서진영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동서독은 공식적으로 다섯 차례(1981.12, 1987.9, 1989.12, 1990.1, 1990.4) 더 양측을 번갈아 오가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제반관계를 발전시켰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여인곤 2007, 1).

동서독정상회담을 통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추진은 통독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을 내걸었을 때 서독 내 보수진영의 반대는 극렬하였다. 동독 체제의 연장과 통일의 영구적 포기가 반대진영 주장의 골자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은 동독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없었고 패전국인 서독이 스

스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오히려 긴장완화와 공존정책을 통해 동독뿐 아니라 동구권 전체의 이완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으로 고통받는 동서독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양무진 2019).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1970년에 약 44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동서독 간 교역액이 통일 직전인 1987년에는 약 14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또한 동서독 간 인적교류도 대폭 증가하였다. 1970년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은 약 110만 명,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은 약 100만 명이었으나, 1986년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은 약 640만 명,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은 약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 따른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 개최와 물적·인적 교류의 증가는 동서독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독일 통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여인곤 2007, 1).

통일 이후 독일 내에서는 동방정책과 같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이 통일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동방정책이 없었다면 동구권의 개혁이나 동독의 평화운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였다. 중요한 것은 당시 동독이 보인 변화이다. 동독은 그토록 원하던 국가성을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자유, 인권, 개방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인적교류를 허용하고 여행을 자유화하였다. 정치적 박해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 정치범을 서독에 넘기기도 하였다(양무진 2019).

2. 동서독 정상회담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교훈

동서독 정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교하거나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해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분단과정도 다르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호광석 2000, 93-94).

첫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이 중요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동서독은 1970년부터 1990년 통일을 완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전개해왔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 있기까지만 해도 정상회담 2회, 장·차관회담 70회, 실무국장급회담 200회, 모두 2년간 272회 회담이라는 부단한 동서독간의 대화와 실천적 노력이 있었다(김강녕 2001, 273).

물론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였고,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이어졌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 당국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함으로써 결국 쌍방간의 입장차이는 서서히 좁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동서독 정상회담은 잘 가르쳐주고 있다(호광석 2000, 93).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협상을 이끈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던 당시 서독의 통일비판세력에 대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다.”는 말로 대응한 바 있다(김연철 2016, 605).

1970년 3월 1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공식회담이 소득없이 끝나자 브란트는 밤늦게 슈토프를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선 모든 의제를 배제한 채 다음 회담 장소와 날짜만을 논의하였고 두 달 뒤 서독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자칫 깨질 뻔했던 동서독 회담은 이렇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모두 네 차례 계속되었다. 1970년 슈토프와 3월 19일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독으로 돌아간 브란트는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앞서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았다. 제2차 회담으로 이어가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고 고백하였다. 결국 그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성공사례로 기록되는 역대 정상회담 중에 첫 만남에서부터 성과를 얻어낸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러나 정상들은 첫술에 배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판 자체를 깨지는 않았다(예영준 외 2000b, 11).

그 후 1989년 12월 드레스덴에서 있었던 콜 서독총리와 모드로우 동독총리 간의 제5차 및 제6차 정상회담은 시위와 경제파탄에 직면한 동독정부가 서독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제의한 회담이었다. 드레스덴 회담에서 모드로우는 동독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만이 전쟁배상금을 지불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보상(모드로우는 “부담조정”으로 표현)으로 120억 마르크를 요구하였으나 콜 총리가 명목상의 부적절성을 구실로 거절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양측은 조약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협력, 20억 마르크의 공동여행 기금창설, 차관증액, 의무환전제도 폐지, 정치범 석방, 브란덴부르크 문 개방 등에 합의하고 조약공동체의 틀 안에서 일련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정상회담 시 동서독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아니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의 상호절충(more or less)하는 방식으로 길게 보고 정상회담을 지속해 나갔음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서로가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이 중요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처음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동서독이 확인한 것은 서로의 분명한 입장차이(立場差異)였다. 즉 동독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동등한 관계수립을 희망하였고 서독은 독일의 대표성을 지니면서 특수관계로 양독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입장차이 때문에 당시 동서독의 정상들은 아무런 성과 없이 두 차례의 회담을 끝냈으나 그 후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체결하였고, 유엔동시가입을 하는 한편, 여러 가지 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그렇다고 해서 쌍방의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없었다. 물론 동서독은 서로 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외세에 의해 전범국 처리차원에서의 분단이 된 점에서 남북한 분단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양독정상 및 실무회담이 보여준 적어도 하나를 양보하고 다른 하나를 얻는 선에서 서로가 만족할 줄 아는 양보의 정신은 남북한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호광석 2000, 93).

예컨대 제1차 회담시 에어푸르트 역 청사에는 “서독연방군을 때려 부

수자.”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제2차 카셀회담 시에는 회담장 밖에서 서독 극우단체와 극좌단체 간에 충돌이 발생, 극우단체 요원들이 동독 국기를 훼손하고 동독대표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서로가 이를 문제시하지 않아 정상회담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염돈재 2014). 제1, 2차 정상회담이 에어푸르트와 카셀로 결정된 것은 서독국민의 86%가 베를린 이외 장소에서의 회담개최를 반대하였으나 동독의 거부로 불가능하게 되자, 양국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에어푸르트와 카셀이 선정되었다.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에서 절차문제 등 사소한 부수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주최 측의 방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절차문제로 회담이 난항을 겪는 일은 없었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양국 국기를 비치하였으나 서독개최 시에는 국기를 비치하지 않았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셋째는 실현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대화과정에서 볼 때, 실현불가능한 문제를 거론하여 논의의 초점을 흐리거나 서로가 민감해 하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실제로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비정치적 분야의 통합문제가 우선 논의되었고,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은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되었다. 그만큼 실현 불가능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회피하는 현명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이 실현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호광석 2000, 93-94).

지난 198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독의 수도인 본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와 같은 양국의 입장차이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분야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논의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김영운·양현모 2009, 14).

넷째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동서독은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때그때 회담의 성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성과없이 끝나거나 무산되었다고 해서 교류

협력관계를 전면 중단하지도 않았다. 또한 성급하게 통일을 운운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호광석 2000, 94).

동서독은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대부분 성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동독측은 서독측과의 정상회담이나 교류가 내부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가급적 이를 기피하려 하였다. 서독의 입장에서 상호교류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교류관계의 보완역할을 하려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서독 모두 정상회담 시 견해차이가 명백한 문제의 논의는 가급적 회피하면서 합의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중하려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서독 정상회담은 남북분단구조에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과 관련해서 좋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향후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상회담 성과를 과도하게 기대할 경우 무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소한 절차문제나 명분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평화문제연구소 2012). 또한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할 경우 그 진의가 무엇이며 내부체제 단속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者 百戰不殆).”는 남북한 정상회담시 유념해야 할 격언이 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은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거나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을 가능성에도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보듯,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도, 당위론적 문제도, 이념적 차원의 것도 아닌 현실의 문제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으로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보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한층 필요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치밀한 사전준비와 미래의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반목과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염돈재 2010, ‘서문’ 참조). 통일 후 30주년이 된 지금, 독일통일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독일민족의 위대한 선택이자 축복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작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다.

독일통일은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통일후 유증에 대한 비판적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지만 서독은 통독 후 내부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통독 후에는 신장된 국가위상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ty)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어 평화통일의 성취와 함께 아시아 지역과 세계무대에서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독일통일과 이를 주도한 동서독 정상회담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V. 결론

동서독 정상회담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동독을 비합법 국가로 간주하고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후 서독은 동독과의 지루한 협상과정에서 여행자유화와 상호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알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비록 초기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획기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한 상호교류의 증대는 동독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이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07).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대외정책적 주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추진에 힘입어 1970년대부터 동서독 간 초당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대화와 교류협력 때문이다(최지선 2015, 64). 동서독은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인

독일통일을 함께 이룩해냈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보여준 ①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 ②서로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 ③실현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문제를 우선시하는 현명함, ④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세, ⑤서독의 동독포용 및 통일역량의 강화노력 등은 통독 30주년이 됨 지금에 있어서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상회담은 성사되기도 어렵지만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일은 더 더욱 어렵다. 역사 속의 정상회담들은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판을 깨지 않고 장기적 안목과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은 경우에만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45년이라는 분단기간 동안 7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을 당시 상황을 보면 국제적 환경이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양독 정상은 대화를 통해 동서독간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는 궁극적인 통일로 이어졌다(최지선 2015, 65-66).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평양방문을 통한 공식적 남북정상회담 개최이후 2018년 세 차례의 공식적 남북정상회담(판문점과 평양), 2018~2019년에 걸쳐 두 차례의 공식적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와 하노이)과 한 차례의 비공식적 북미정상 접촉(판문점)도 가졌다. 모두 쉽게 얻어진 것은 없었다.

동서독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 시사해주는 점은 지나치게 성급한 기대보다는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기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만남과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은 북한의 핵·미사일 변수가 있어 동서독의 상황이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적어도 독일통일이 당사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실현된 평화통일이었다는 사실은 통독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아도 적실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즉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대화와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증진 및 한반도 평화통일의 키워드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즉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남북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서 최소한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만이라도 주어지면 다행이라는 소박하고 조심스런 기대를 가지고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대북접근방법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회담의 주체인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회담을 준비하는 관계자들도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만 남북한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자세로 성실히 회담에 임하고 준비하고 이미 합의한 사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후일 더 큰 성과로 이어져 통일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통일의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민주·평화·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은 ‘되는 것(Werden)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Machen)이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지와 역량으로 성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김강녕 2000, 177).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초당적인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북주민의 서독체제로의 편입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들의 통일승인이 합쳐진 데서 찾아볼 수 있다(양병기 2014, 439). 우리도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①지속적인 남북대화과 교류협력, ②한반도 통일이해관계국에 대한 평화통일의 전개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 강화, ③한국의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정상회담(및 후속회담), 교류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력(특히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통일전문인력 등) 등의 증진노력이 아무리 힘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통일을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이 없이는 조국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내와 노력(특히 대내외적 통일대비능력의 증진)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룩할 수 있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상두. 2007.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 서울: 오름.
-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2007. “남북정상회담: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 『국제신문』(10월 2일).
- 권세영. 2018. 『독일통일 사례에서 본 한반도 통일문제』.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 김강녕. 2000. 『남북한 정치외교론』. 서울: 대왕사.
- 김강녕. 2001.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서울: 형설출판사.
- 김강녕. 2013. 『국제정제와 외교·안보』. 경주: 신지서원.
- 김연철. 2016.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2016.
- 김영윤·양현모 편,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서울: 통일부.
- 김학준. 1989.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 김현경. 2018. “세기의 만남, 역사 바꾼 정상외교: 냉전의 결과물 ‘한반도 분단’…북미정상, 완전종식 대미장식?” 『헤럴드경제』(5월 11일).
- 이종인 율김. 데이비드 레이놀즈 지음. 2020. 『정상회담: 세계를 바꾼 6번의 만남』. 서울: 책과함께.
- 디지털뉴스부. 2007. “남북정상회담: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 『국제신문』(10월 2일).
- 라동철. 2018. “세기의 정상회담.” 『국민일보』(6월 13일).
- 미래한국. 2007. “정상회담의 3가지 종류”(10월 4일).
- 박래식. 2008. 『분단시대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서울: 백산서당.
- 백경남. 1991.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 서울: 강천.
- 손선홍. 2005. 『분단과 통일의 독일현대사』. 서울: 소나무.
- 손선홍. 2016. “독일통일을 위한 외교활동과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통일부. 『외교분야 II 관련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9.
- 송태수. 2010. “동서독 정상회담의 경과와 그 함의”(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 독일통일 20주년 기념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양무진. 2019. “통일과정의 동서독 교훈,” 『대전일보』(2월 8일).
- 양병기. 2014. 『현대남북한정치론』. 파주: 법문사.
- 여인근. 2007. “동서독 정상회담의 교훈과 2007 남북정상선언 평가.” *On Line Series*. CO 07-21(10월).
- 염돈재. 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 염돈재. 2014. “동서독 정상회담이 南北 정상회담에 주는 교훈.” 『데일리 NK』(5월 22일).
- 예영준·이상언·장정훈. 2000a .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 평화를 이끈 결단들.”

- 『중앙일보』(5월 30일), 8.
- 예영준·이상언·장정훈. 2000b.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 中: 인내심 게임.” 『중앙일보』(2000.5.31), 11.
- 예영준·이상언·장정훈. 2000c.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 下: 중재자 활용해야.” 『중앙일보』(6월 1일), 8.
- 외교부. 2017. 『2017 독일개황』.
- 이봉기 역. Uwe, Müller 저. 2006. 『대재앙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 이상언·장정훈. 2000. “역사를 바꾼 정상회담 下: 빛나는 조연들.” 『중앙일보』(6월 1일), 8.
- 이종인 옮김. 데이비드 레이놀즈 지음. 2020. 『정상회담: 세계를 바꾼 6번의 만남』. 서울: 책과함께.
- 정용길. 2009.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영. 1975. “중·소관계,” 정인흥·김성희·강주진,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 최지선. 2015. 『동·서·독 정상회담 전개과정과 특징연구: 남북정상회담에 주는 시사점』(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 2000.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집』. 서울: 통일부.
- 통일연구원 역. De Maiziere, Lothar 저. 2001. “동서독관계에서 정상회담의 의미와 역할”(남북정상회담 1주년 학술회의자료. 통일연구원).
- 호광석. 2000.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와 시사점.” 『통일경제』(5월).
- 황흥룡. 2018. “분단국가들의 통일사례와 그 교훈: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 『브레이크뉴스』(12월 31일).
- “정상회담.” 『위키백과』. 2020.8.4.
- Grenville, John Ashley Soames. 2001.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Twentieth Century: A History and Guide with Texts*. London: Routledge.
- Reynolds, David. 2007. *Summits: Six Meetings that Shaped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Wehmeier, Sally. 2000.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kipedia. 2020. “Global governance”(September 4).
- Wikipedia. 2020. “Summit (meeting)”(April 5).
- Wikipedia. 2020. “Ping-pong diplomacy”(September 26).
- Zelikow, Philip and Rice, Condoleezza. 1995.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ynolds, David. 2013. "Summit, Diplomacy: Some Lessons from History for 21st Century Leaders" (4 June). <https://www.gresham.ac.uk/lectures-and-events/summit-diplomacy-some-lessons-from-history-for-21st-century-leaders>(search date: September 14, 2020).
- 김재현. 2017. "동, 서독 첫 정상회담 개최"(3월 15일). <http://m.blog.daum.net/gmania65/847>(검색일: 2020.9.15.).
- 평화문제연구소. 2012. "동서독 정상회담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6월 8일), <https://blog.naver.com/ipa1983/159474965>(검색일: 2020.9.9).
- 건축정보. 2020. 『순위 & 지식』. <https://architecture-info.tistory.com/category/>(검색일: 2020.9. 9).
- <https://www.dictionary.com/browse/summit-meeting>(검색일: 2020.1.6).

투고일 : 2020년 10월 28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 김강녕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화정치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Global Society』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National Strategic Value and Role of Jeju Base"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국방혁신의 과제" 등이 있다.

<Abstract>

East-West Germany Summit : Role of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Implications to Korea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East and West Germany held a total of seven official summits (and six unofficial summit meetings) from 1970 to 1990, 25 years after their division, until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East-West Germany achieved peaceful reunification in 1990 based on continued dialogue,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combines cold reason with warm emotion.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East-West German summit still provide many less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inter-Korean summit, including: ①the promotion of continuous dialogue based on the long-term view of East-West Germany, ②the spirit of dialogue yielding to each other, ③the wisdom of putting aside unreal and sensitive issues and umbrellas, ④the attitude of solving them step by step without haste, ⑤the efforts of West Germany to embrace East Germany and strengthen its unification capabilities i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We should take lessons from German reunification and pursue: ①continuous inter-Korean dialogue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②peace and unification diplomacy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strengthen trus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③strengthen Korea's capacity for peaceful unification.

Keywords : East-West Germany Summit, Brandt's Eastern Policy, Inter-Korean Unif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Unification Diplomacy, Strengthening Unification Capability